

Beyond the RISK
Geopolitical Research

지정학분석
2021년 4월

이슈 1.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 시작
이슈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리서치센터 | 2021년 4월 14일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SAMSUNG

Geopolitical Research

Executive Summary

리서치센터 지정학분석팀

유승민 팀장 (兼 글로벌투자전략팀장)
strategist.you@samsung.com
박혜란 연구원
hyerani.park@samsung.com

이슈 1.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 시작

-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하였다(2월 24일). 관련부처 장관들은 '핵심공급망'과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100일과 1년 이내에 대통령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백악관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포괄적인 공급망 개혁에 나설 것이다.
- 행정명령은 소위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정치행위이다. 이에 대해 미국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고, 잠재적 비용 증가와 국익저해를 논리로 정부에 신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공급망 개선 요구 사이에서 'China plus One'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슈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 미-중 정상間의 첫 전화통화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일이나 지나서 이뤄졌다(2월 10일). 이례적으로 2시간이나 진행됐던 이번 통화에서 새삼 주목 받은 단어가 「핵심이익(core interest)」이다.
- 중국이 주장하는 「국가핵심이익」의 개념은 2009년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변화되어 왔다. 특히 시진핑 집권시기에 들어서는 '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보, ③ 국가발전이익' 등의 3가지로 축약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가핵심이익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우려한다.
- 투자의 관점에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과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대립은 중요 변수이다. 관련하여 중국의 '제1, 제2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 안에 있는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주목되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위한 주요 원자재로서 원유의 지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지정학의 초점은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동/남중국해'로 이동하고 있다.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 당사의 '지정학위험 평가위원회'는 '미-중 갈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4월 평가에서는 동 이슈의 발생확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예상충격에 대해 모두 크게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진영화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릴 D-10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의 전개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위원회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계감을 보였다. 북한은 연초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각 부문, 계층별로 회의를 소집해 자력갱생을 독려하는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다시 언급하는 등, 향후 북미협상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시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Geopolitical Research

Contents

01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 시작 5p

1-1. 첫 단계로 공급망 검토 5p
1-2. China Decoupling 정책에 대한 美 산업계의 우려와 주장 7p
1-3. 미국, 신중한 對중국 경제압박 정책 기조 예상 9p
1-4. 다국적 기업들의 예상되는 대응, China plus One 11p

0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12p

2-1. 미·중 첫 정상간 통화에서도 언급된 「핵심이익」 12p
2-2.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핵심이익 14p
2-3. 지정학의 인질, 아시아 '반도체 생산망' 16p

0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18p

3-1. 글로벌 10대 지정학위험 18p
3-2. GPR로 본 관찰국가 20p

04 참고자료 21p

4-1. 중국의 '국가주권'과 「하나의 중국」 21p
4-2.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 (전문번역) 27p
4-3. 2021년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32p
4-4. 주요국 Misery Index 33p
4-5. 주요국의 GPR 추이 35p

We know that no one ever seizes power
with the intention of relinquishing it.
포기할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George Orwell 조지 오웰 -
(소설가, 그의 작품 '1984'에서)

1.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China Decoupling) 전략 시작

1-1. 첫 단계로 공급망 검토

-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하였다[1]. 이번 명령은 미국이 특정 중요 부문에서 '외국 공급 업체에 위험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시각 하에 "미국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Biden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 명령은 「핵심공급망」과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에 대한 검토 등의 2개 분야로 나뉜다.
- 핵심공급망 검토는 '반도체, 배터리, 전략적 광물 및 의약품' 등의 공급망에 대한 위험 검토가 초점이다. 관련하여 4개 부처 장관이 100일 이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표 참고).
- 한편,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 검토는 중요 비즈니스 부문(국방, 공중 보건, 정보 및 통신 기술, 에너지, 운송 및 농업)에 대해 부품이나 재료 등을 외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각 부문별 공급망 검토는 이후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APNSA[2])과 경제정책보좌관(APEP[3])에 의해서 조율되어, 종합보고서로 완성된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은 정보수집에 초점을 맞춘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향후 백악관은 수집된 핵심정보를 토대로 포괄적인 공급망 개혁에 나서게 될 것이다.
-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요청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 ① 협력 업체와 파트너를 성공적으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 경제, 안보, 무역 정책, 정보 및 기타 조치'
  - ② 공급망 탄력성, 보안, 다양성 및 강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국내 및 국제 무역 규칙 및 계약에 대한 개혁'
  - ③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개혁'
  - ④ 중요 상품 및 자재 및 기타 필수 상품 및 자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연방 인센티브 및 연방 조달규정의 수정' 등
-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행정명령이 요구하는 보고서가 '차이나 디커플링'을 향한 프로세스의 첫 조치일 뿐이며 향후 보고서를 통해서 식별된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다만, 이번 공급망 검토가 향후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를 참여(공급망의 다양성 촉진)시키고, 국제 무역 규칙 및 계약의 개혁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래 행정명령 서문 참고)

---

[1] 27페이지 이하에 전문 번역 소개

[2]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현재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3]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현재는 조엘 갬블(Joelle Gamble)

대통령 행정명령 14017호[4] 서문 일부

미국은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 사이버 공격, 기후적 충격 및 극심한 기상, 테러 공격, 지정학적 및 경제적 경쟁 그리고 다른 기타 환경들은 중요 생산 능력과 중요 상품, 제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과 무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공급망이 탄력적이고 안전하고 다양할수록, 이는 국내 생산 확대, 다양한 공급, 내장된 잉여분, 적절한 비축,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적인 미국 제조업 기반과 노동력을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탄력적인 공급망을 긴밀히 협력하면 집단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 재해 및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14017호의 개요

분야	책임 부처장
핵심 공급망 검토 (10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6월 5일까지)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상무부장관
전기자동차용을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부장관
희토류 및 중요 광물	국방부장관
의약품 및 활성의약품 성분	보건복지부장관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 검토 (1년 이내에 보고서 제출; 내년 2월말)	
국방	국방부장관
보건	보건복지부장관
정보통신	상무부장관/국토안보부장관
에너지	에너지부장관
운송	교통부장관
농업 및 식품	농무부장관
총 평가 (내년 2월말 이후, 위를 토대로 종합보고서 제출)	
전 분야의 조치 검토 및 개선방안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경제정책보좌관

자료: 美 백악관, 삼성증권

[4] 원문 제목은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1-2. China Decoupling 정책에 대한 美 산업계의 우려와 주장

- 200만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올해 초 「디커플링의 이해: 거시적 추세와 산업충격[5]」이라는 90여쪽의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對중국 견제정책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핵심주장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감행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익에도 해로울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이다.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주요 4개 분야의 잠재적 비용과 미 국익 침해 (미 상공회의소 주장)

무역경로: 만약 25%의 관세가 양국간의 모든 무역에 적용된다면,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1,900억달러의 GDP 손실을 입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중국 접근성이 (미래에) 사라진다면 미국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가 감소하고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며 R&D예산이 축소되고 경쟁력이 저하되어 손해는 더욱 커진다.

투자경로: 미국 내 FDI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의 자본손실을 입을 것이며, 최대 5,000억달러의 1회성 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모델은 예측한다. 중국으로부터의 FDI 감소는 미국의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이 투자가) 다른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인적교류: 코로나19는 중국으로부터 관광 및 교육지출 축소로 인한 미국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향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절반으로 이 규모가 감소한다면, 미국은 서비스 수출에서 연간 150~300억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R&D(아이디어): 디커플링은 미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량화는 어렵다. 미국 내 중국사업에 대한 R&D지출은 감소할 것이고, 다른 나라기업들도 미국에서 동참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다른 국가의 업체로 공급망 전환, 미국 혁신에 대한 VC투자유치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이용해 다른 국가들은 글로벌 혁신에서 미국과 격차를 축소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우려에서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5가지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다.
- 첫째, 對중국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영향 평가, 비용 편익 분석, 공개 토론' 등을 요구했다. 국제 관계는 증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고 특히 對중국 정책은 경제적 영향 평가, 비용 편익 분석, 공개 토론 및 발견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진행되는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더 크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 둘째, '완전한' 디커플링의 과도한 비용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부분적 디커플링(국가 안보나 경제적 회복성과 무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용), 잠정적 디커플링(향후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정 가능), 그리고 평화적 디커플링(구체적 내용보다는 비용 회피에 초점)' 등을 제시했다.
- 셋째, 미국의 포괄적인 중국 정책 프로그램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산업, 혁신 및 기술 촉진; 규칙 기반 개방 시장 질서와 그 기관의 보존; 그리고 의도됐거나 돌발적인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과 산업을 보호' 등이 포함된다.

[5] UNDERSTANDING DECOUPLING: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

- 넷째, 정책입안자들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외국의 파트너들에게 비용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모든 일방적인 정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통한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정치적) 지지는 목적의 상식과 공유된 경제적 이익과 가치에 뿌리를 둘 수 있을 뿐이며 투명성과 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중 관계에 대한 조정을 위한 더 명확한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쌍방향 교역에서 총 7,370억 달러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10만 건 이상의 개별 국가 간 투자 거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시간을 갖고, 그에 비추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계와 상의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취했던 선택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과 같은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터 준비되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살펴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017호도, 공급망 검토의 대상을 시급성과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과 '광범위'으로 나눴으며, 또한 장기, 전략적 대응은 최종적으로 백악관이 조율 및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주요 4개 분야에서 미-중의 관여 정도 (%): 미국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야	내용	2008년	2018년
무역	중국으로부터 재화 수입	16.4	21.2
	중국으로 재화 수출	5.4	7.2
	중국으로부터 서비스 수입	2.7	3.2
	중국으로 서비스 수출	3	6.9
투자	중국 내 미국의 FDI 스톡	1.7	2
	미국 내 중국의 FDI 스톡	0.1	0.9
인적 교류	중국인 대상 미국 전문비자 발급**	7.1	15.3
	미국 내 중국 유학생	13	33.2
	중국 내 미국 유학생	5	3.4
	중국의 미국으로 여행, 유학 송출	3.5	3.1
	미국의 중국으로 여행, 유학 송출	3.9	14.9
R&D	미국 내 중국 사업에 대한 R&D 지출***	0.1	1.6
	미국 사업 R&D에 대한 중국의 지출****	4	6.4

참고: * R&D 지출은 2009년과 2017년 데이터
** 중국은 미국 관련 해당 비자발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 미국의 총 대외 R&D 지출 중 중국 관련 비중을 의미
**** 미국 내 R&D 유입 중 중국으로부터 비중을 의미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Census Bureau,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Rhodium Group (RHG) calculations. 삼성증권

1-3. 미국, 신중한 對중국 경제압박 정책 기조 예상[6]

- 얼마 전까지도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중국과 포괄적인 디커플링이 자국의 국익증진에 가능한 접근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각국 경제의 연결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제시된 이후에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위 '결별의 수준(Degrees of Separation)'으로 노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디커플링이 실현불가능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이다.
-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패권경쟁국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다 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지금은 그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각 분야에서 對중국 전략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의 CSIS(전략국제연구센터)는 최근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소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형성된 과거의 동기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 보고서는 미-중 관계의 동기가 부여된 분야로 '① 지정학전략, ② 경제, ③ 인권 및 시민사회, ④ 글로벌 규범 및 표준, ⑤ 글로벌 공공재, ⑥ 기술 및 혁신' 등을 지적했다. 각각의 구체적 목표들은 달라지고 있지만, 이 6개 분야는 양국이 관여를 예측하기 위한 핵심적 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은 이들 각각의 분야를 구분한 별개의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 주목하는 점은 「경제적 제재수단」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수단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졌고, 군사행동의 (직간접적)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적 제재 수단을 더 활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제재'에 대한 연구들은 해당국의 행동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많았다고 평가했다. 실패의 이유는 경제제재가 높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동맹국 및 자국의 기업이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7]. 이런 이유로 간혹 제재에 대한 위협만이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했다[8].
- 게다가 일방적인 제재남용이 자칫 장기적으로 제재 시행국에게 부담이 된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또는 잘못된 공급망 압력을 사용할 경우 경쟁자들은 그 영향력 밖에서 비즈니스기회를 모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9].
-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스톤 컨설팅그룹(BCG)는 최근 연구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국내 챔피언 지원정책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5% 가량 낮출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10].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와 달리 신중하고도 정교한 대중국 경제 압박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CSIS는 미국 정부에게 제재당사국(÷중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보정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제제 수단을 사용할 때는 동맹국과 함께 또한 민간 부문의 협력과 함께 전개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향후 경제적 제재도구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6] CSIS의 최근 보고서 'Degrees of Separation A Targeted Approach to U.S.-China Decoupling(2021년 2월)'를 참고하여 작성

[7] Gary Clyde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Third Edition (Washingt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8] Daniel W. Drezner, "The Hidden Hand of Economic Coerc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 no. 3 (2003):645

[9] Jacob J. Lew, Preserving the Power of US Economic Statecraft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May 1, 2019)

[10] Antonio Varas and Raj Varadarajan, How Restrictions to Trade with China Could End U.S. Leadership in Semiconductors (Boston: Boston Consulting Group, March 2020)

미국의 대중국 관여정책의 동기 변화의 역사

영역	1972~1989	1989~2001	2001~2017	2017~2020
지정학전략	- 소련과 세력균형 - 공격방지(예, 대만) - 비확산 지지	- 공격방지(예, 대만) - 비확산 지지 - 불량국가에 협력	- 공격방지(예, 대만) - 비확산 지지 - 불량국가에 협력 - 해양규범 강요	- 공격방지(예, 대만) - 비확산 지지 - 불량국가에 협력 - 해양규범 강요
경제		- 시장지향적 개혁 및 글로벌 경제 통합 촉진	- 시장지향적 개혁 및 글로벌 경제 통합 촉진 - 균형 성장모델 촉진 - 시장 접근성 증대 - 글로벌 경제 및 재정안정성 유지	- 균형 성장모델 촉진 - 시장 접근성, 상호성 증대
인권 및 시민사회	- 혁명정권에 대한 지원제한	- 개방, 인권 및 민주적 선택을 위한 중국 내부 지원 구축 - 시민사회 지원	- 개방, 인권 및 민주적 선택을 위한 중국 내부 지원 구축 - 시민사회 지원	- 개방, 인권 및 민주적 선택을 위한 중국 내부 지원 구축 - 시민사회 지원 - 인권침해에 대한 반발
글로벌 규범 및 표준		- 글로벌 무역규범 준수장려	- 글로벌 무역규범 준수장려 - 개정된 글로벌 거버넌스에 협력	- 글로벌 무역규범 준수장려
글로벌 공공재			-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공중보건 개선 - 저소득국가 개발	- 저소득국가 개발
기술 및 혁신	- R&D 협업 장려	- R&D 협업 장려 - 미국 제품시장 개발 및 공급망 통합 - 지적재산보호	- R&D 협업 장려 - 미국 제품시장 개발 및 공급망 통합 - 지적재산보호 - 법치 및 규제투명성 확대	- 지적재산보호 - 법치 및 규제투명성 확대

참고: Degrees of Separation; A Targeted Approach to U.S.-China Decoupling - Interim Report, 2021년 2월
자료: CSIS, 삼성증권

1-4. 다국적 기업들의 예상되는 대응「China plus One」

-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의 갈등관계로 인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17%가 공급망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11]. 실제로 트럼프 재임기간 중 관세인상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조달과 제조를 하는 비용을 증가시켰다. 일부 연구는 미국의 전자제조업체의 69% 이상이 대중국 관세로 인해 마진이 축소되었다고 분석한다[12]. 특히 기술 디커플링이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다. 때문에 미국의 Tech 기업들은 하드웨어 생산능력을 중국 외부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과정에서 물류의 애로로 인해 비상물품 및 국가안보관련품목들의 on-shoring 또는 near-shoring의 필요성이 각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의료, 제약 그리고 개인보호장비(PPE[13]) 등이다. 각국은 의약품 생산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의료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거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 이러함에도 불구, 중국 소비시장의 강력한 성장성은 각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철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요인이다. 맥킨지의 조사에 의하면, 24개 주요 소비품목에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18%이다. 중국의 소비 시장은 달러기준으로 매년 12% 성장하여 2022년까지 8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34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성장은 폭발적이어서 2040까지 전세계 증가에 대해 44%의 기여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4].
- 저부가가치 공급망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SEAN 국가들에게 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노동력의 질적인 차이가 여전히 크다[15]. ILO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의 노동자수는 7억 8,000만명인데, 이는 베트남보다 14배 많다. 게다가 중국 직원의 일일 근무시간은 베트남보다 평균적으로 5시간 더 길고, 생산성 또한 ASEAN 주요국보다 더 우수하다(2018년).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의 불과 2%만이 향후 3~5년 이내에 중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美 상공회의소, 2020 China Business Climate Survey Report).
- 이상과 같이 중국의 시장규모, 노동생산성 그리고 인프라 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당장 중국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소위 'China plus One'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중국에서 제조업 공급망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도한 집중 위험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충격으로부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이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China Decoupling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와 실행수단이 정교해야 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

[11] PWC: COVID-19 creating supply chain challenges for US companies in China, as majority of firms see a return to normal within three months

[12] IP: Tariff War Fallout. U.S. Electronics Manufacturers Worried About Higher Tariffs and Laboring to Mitigate Impacts.(2019.10)

[13]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14] Oxford Economics: China's consumers shake the (retail) world.

[15] Sourcing Journal: Moving Supply Chains Out of China Isn't So Easy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2-1. 미-중 첫 정상간 통화에서도 언급된「핵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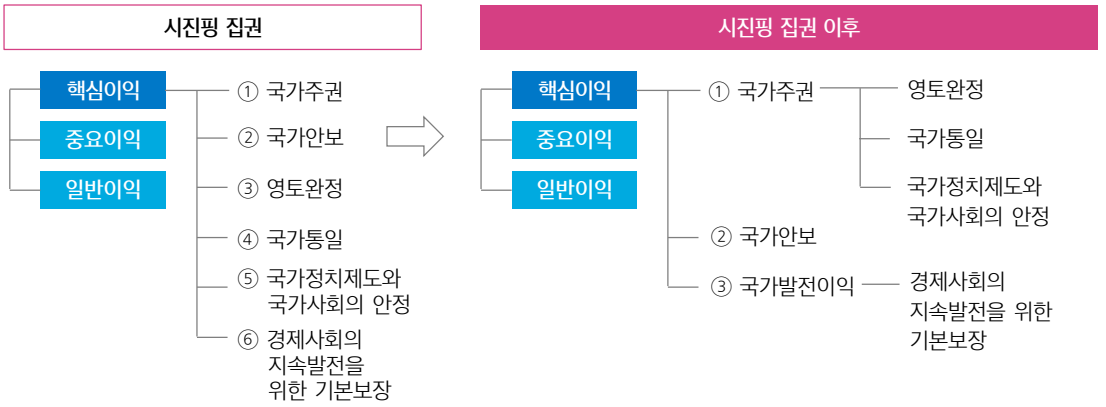
- 미-중 정상間 첫 전화통화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일이나 지난 2월 10일에야 이뤄졌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2시간이나 진행됐던 이번 통화에서 새삼 주목받은 단어가「핵심이익」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민족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 신장 지역을 향한 더욱 강경해지는 조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홍콩, 신장, 대만 지역 이슈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미국은 중국의 자주권과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이란[16]?

-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이 '공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부터이었다. 당시 다이빙궈(載秉国) 국무위원은 핵심이익의 3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했다. 바로 '기본제도와 국가안보의 수호, 국가주권과 영토완정(領土完整),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등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등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 핵심이익의 개념은 이후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일관성 없이 사용되다가 2011년 9월 6일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규정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화평발전' 백서를 통하여「국가핵심이익」을 '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보, ③ 영토완정, ④ 국가통일, ⑤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등 6가지라고 공표한다.
- 한편, 시진핑 집권시기에 들어서 국가핵심이익의 개념은 '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보, ③ 국가발전이익' 등의 3가지로 축약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핵심이익'의 연원을 '화평발전노선'으로 본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중국 위협론'에 맞서, 자국의 부상이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04년경부터 '화평발전'을 천명하기 시작했다. '부상국(rising power)은 패권전쟁을 일으키는 도전국이 될 것이라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중국은 현상유지국가(status quo state)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중국의 화평발전론에 내포된 수정주의적 특징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문제를 삼는 실질적 이유는, 중국이 국가핵심이익을 강조할수록 대외정책 행태가 공세적, 심지어 공격적으로 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핵심이익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 수단에는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 특히 '현상유지-수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 집권 시기에 부상 정책의 수정주의 특징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몽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목표로 삼고, 미국 등 강대국에게는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이 섹션은「국가핵심이익:중국 화평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이민규,서울연구원, 2020」의 내용 인용

중국의 국가이익과 국가핵심이익의 요소



자료: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2011), 국가핵심이익(2020, 이민규) 등을 참고하여 삼성증권 작성

최근 중국은 핵심이익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있음

연도	대상국	OECD회원국	이슈	성질	중국의 대응수위
2008년	프랑스	○	달라이 라마 회견	연성	정치, 경제
2010년	일본	○	센카쿠열도 해역 중국어선 나포	강성	무력 과시
	노르웨이	○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연성	정치, 경제
2012년	일본	○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강성	무력 과시
2016년	타이완	X	차잉잉원 총통 당선	연성	정치, 경제
	몽골	X	달라이 라마 회견	연성	정치, 경제
	필리핀	X	남중국해 영토분쟁	강성	무력 과시
2017년	한국	○	사드 배치	강성	정치, 경제

자료: 국가핵심이익 - 중국화평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2020, 이민규)

2-2.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핵심이익

- 아래의 3개 표는 관영지인 인민일보에서 중국 국가핵심이익인 '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보, 그리고 ③ 국가발전이익' 등에 대해 거론된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지역 및 이슈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핵심이익 중 '국가주권(영토완정, 국가통일,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등 포함)'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맞물려 중국이 단호하게 여기는 분야이다. 이 정책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은 나뉠 수 없고 하나이며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이다(21페이지 이하 갈등지역 참고).
- '국가안보'에 관련해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슈는 '해양권익'이다. 후진타오 시대에 '광동군구 항공병, 국방과학기술, 제2포병, 군사투명도' 등 주로 내부적 관심사에 치중되었다가, 시진핑 시대에는 확장적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역내 국가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불안요소이다. (앞 페이지 아래 표 참고).
- 한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국가발전이익에 관련된 이슈로 거론되는 것들은 '개방 발전전략, 인류 공동이익, 과학기술, 신과학기술혁명,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건설, 국가이미지, 지속가능발전, 토지' 등에서 지평이 크게 넓어졌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협력 또는 충돌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국가핵심이익 중 「국가주권」과 관련해 인민일보 보도에서 거론된 주요 「지역」 (2000~2018년)

구분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
			영토완정	국가통일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후진타오 1기	2003년						
	2004년	대만					
	2005년		대만	대만			
	2006년			대만			
	2007년	대만	대만	대만	대만		
후진타오 2기	2008년			대만	티베트		
	2009년	티베트, 마카오	티베트				
	2010년	대만	티베트, 댜오위다오				
	2011년	티베트					
	2012년		댜오위다오	마카오			
시진핑 1기	2013년	티베트	티베트	대만		남중국해	
	2014년	대만, 티베트, 신장				티베트, 남중국해	
	2015년			대만, 홍콩			
	2016년	대만, 티베트, 신장	홍콩		홍콩	홍콩	
	2017년	대만, 홍콩	남중국해		신장	대만, 홍콩, 남중국해	
시진핑 2기	2018년	홍콩	홍콩	티베트, 신장	신장		대만, 티베트, 마카오, 홍콩

자료: '국가핵심이익-중국화평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2020, 이민규)'를 참고하여 삼성증권 작성

국가핵심이익 중 「국가안보」과 관련해 인민일보 보도에서 거론된 주요 「이슈」 (2000~2018년)

구분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후진타오 2기	2010년			군축과 감축	
	2011년			광동군구 항공병, 국방과학기술, 제2포병, 군사투명도	
	2012년			3개 악세력, 핵실험, 해양권익	
시진핑 1기	2013년			해양권익	
	2014년			해양권익, 한반도긴장	국방과 군대건설
	2015년			국가안보법, 강군	
	2016년	해양권익, 국가안보법		한반도 사드배치	
	2017년	해양권익	해양권익	해양권익, 국가안보법	국방과 군대건설

자료: '국가핵심이익-중국화평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2020, 이민규)'를 참고하여 삼성증권 작성

국가핵심이익 중 「국가발전이익」과 관련해 인민일보 보도에서 거론된 주요 「이슈」 (2000~2018년)

구분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후진타오 2기	2008년			경제건설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이미지, 지속가능발전, 토지
	2012년			재생에너지
시진핑 1기	2013년		중대형 국유기업 핵심 상업기밀	인터넷 유언비어, 중대형 국유기업 핵심 상업기밀
	2014년			빅데이터, 인터넷 안보와 질서, 정보강역
	2015년			과학기술
	2016년	개방발전전략, 인류공동이익	개방발전전략, 인류공동이익	개방발전전략, 인류공동이익
	2017년			과학기술, 신과학기술혁명
시진핑 2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자료: '국가핵심이익-중국화평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2020, 이민규)'를 참고하여 삼성증권 작성

2-3. 지정학의 인질, 아시아 '반도체 생산망'

- 일각에서는 최근 미-중간의 패권대결을 과거 미-소간의 냉전과 비교하여 '新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 과거 냉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 진영 사이의 완전한 분리이었다. 군사적으로는 'NATO 對 바르샤바 조약기구'이고 경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체제[17] 對 COMECON[18]'이었다. 이와 달리 현재의 '新냉전'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서로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 또한 과거 소련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최고 10%를 넘기지 않았던 반면,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압도적이며 경쟁국인 미국의 절대규모를 향후 10년 이내에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차이도 있다.
- 이 같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 특히 경제적 위상 상승에 대해 미국이 가지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 미국은 닉슨 정부부터 對중국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의 초기 목표는 냉전시대 당시 소련과 중국의 분리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자유화(Liberalizing China)이었다. 중국을 시장경제化 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 자유화와 공산당의 포기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포용정책을 이용하여 첨단기술을 무단으로 획득하고, 결국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19]
- 따라서, 이제 미국은 중국경제와 탈동조화(decoupling)를 시도하려고 한다. 미국이 제공한 중국경제의 상호의존 심화가 중국 경제 번영의 기초였으므로,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본 보고서의 첫째 섹션에서도 지적했지만, 강력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구매력 확대로 미국의 전략적인 운신의 폭이 좁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전략적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우선 주목할 분야는 기술분야 통제이다[20].
- 이는 과거 미-소 대결 당시 미국의 핵심전략이었던 '봉쇄정책'과 유사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시도하는 공급망 재편은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China plus One' 전략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치명적이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술통제는 다르다.
- 미국이 우선해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이다. 2014년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률은 매우 낮으며, 최근 3년래 15%대에서 정체상태이다[21].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자급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봉쇄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 하지만, 반도체에 관해서는 미국도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중국으로 기술유출은 막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45~50%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대만이 각각 메모리의 70%를, 비메모리의 83%를 생산하고 있다.

---

[17] 이 체제는 70년대에 와해되었다고 본다. 다만 이 체제에서 구축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그리고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8] 경제상호원조위원회(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실시한 유럽재건, 원조계획인 마셜플랜에 대항해서 설립. 1949년 1월에 소련이 주도해서 창설되었고, 1991년 6월에 해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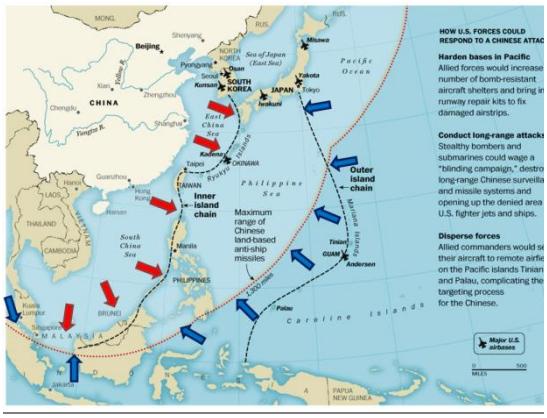
[19] 당사의 지정학분석 2월호, 13pg

[20]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1] IC Insight는 2025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19.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해는 15.9%이었다. 이는 정부 목표인 70%에 크게 미달한다(한국경제신문, 2021년 2월 24일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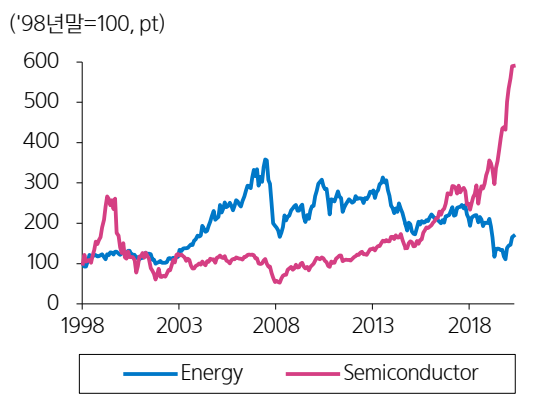
-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에 반도체 공급시장의 판도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대만은 기술주도력과 R&D 지출 및 투자계획에서 압도적이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두터워질 전망이다. IoT 분야의 성장뿐 아니라, 기타 분야의 투자에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 및 민간 부문 지출을 지배할 "녹색"자본지출과 차세대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다. 이제 '반도체는 성장을 위한 주요 원자재로서 원유의 지위를 넘어서고 있다.'
- 지정학 관점에서 심각성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과점국가인 한국과 대만이 중국의 방위전략의 핵심축인 소위 '제1, 제2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의 안에 위치한다는 점이다[22]. '도련선'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력전개의 목표선이자 대미 방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이 지역(남/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이 제1 도련선을 확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아시아 반도체 생산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게 국가안보를 보증하고 있지만, 양국에게는 중국도 중요한 고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통한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운 OPEC」로 비유하기도 한다.
- 결국 '글로벌 지정학의 초점'은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동/남중국해(≒서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다. 만약 향후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면, 과거 1~2차 오일쇼크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투자 아이디어:** 물론 급진적 시나리오를 높은 확률로 상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Top-down으로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전략을 흔들 수 있는 최악의 변수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Bottom-up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비중 확대를 유지할 필요성을 의미한다[23].

중국의 제1, 2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



자료: 나무위키

MSCI 에너지 지수 vs. 반도체 지수 비교



자료: REFINITIV, 삼성증권

[22] 이는 보다 광의적인 'A2/AD(Anti-Access Area Denial)'로도 불림. 해양군사력이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 거부전략.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달러화 노출 투자로 위험 헤지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3-1. 글로벌 10대 지정학위험[24]

- 당사의 '지정학위험 평가위'는 '미-중 갈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4월 설문에서 동 이슈에 대한 발생확률 및 (금융시장에 대한)충격에 대해 모두 크게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진영화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릴 D-10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의 전개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위원회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경계감을 보였다. 북한은 연초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각 부문, 계층별로 회의를 소집해 자력갱생을 독려하는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다시 언급하는 등, 향후 북미협상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시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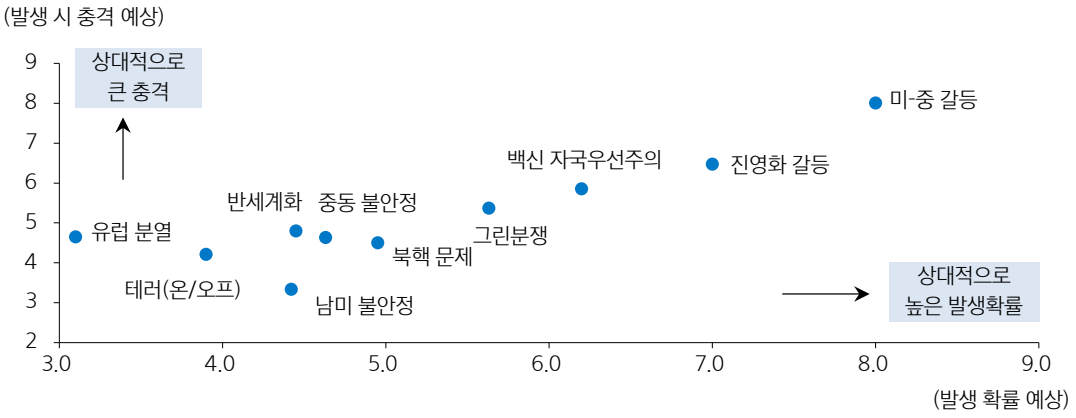
2021년 10대 지정학위험과 평가

분류	예상 위험	내용
패권전쟁	1. 미-중 갈등	美는 급성장하는 中을 미래의 패권경쟁자로 인식하고 군사, 경제 등에서 압박 중.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정책. 특히 美는 中 견제는 모든 정파가 동의하는 가운데, '제도화'되고 있음
	2. 갈등의 진영화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는 글로벌 경제에서 中의 위상이 美와 대등하며 조만간 역전 예상. 美가 홀로 中을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 따라서 美는 동맹과 함께 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 이 같은 진영화 요구는 군사 및 경제 등 전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크며, 심각한 갈등 가능성 내포
역내 불안정	3. 북핵 문제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하며, 美에게 대등한 협상 요구. 그러나 美는 先핵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이 큼.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
	4. 유럽 분열	Brexit로 유럽의 분열 이슈가 현실화되고 있음. 물론 Next Generation EU(경제회복기금)합의와 같은 결속을 위한 시도가 있으나, 여전히 남유럽을 중심으로 회의주의 팽배. 올해 정치적으로는 유럽결속을 주도한 메르켈의 임기 종료가 예정
	5. 중동 불안정	종교, 민족 등의 갈등이 2차 대전 이후 지속 중인 지역. 국제원유 공급의 다변화로 중동지역의 중요성 떨어지면서 장기 분쟁지역화 및 갈등심화 우려. 바이든 정권에서 美-이란 관계 노력 예상되나, 신뢰회복에 시간 필요
	6. 남미 불안정	코로나 이후 경제난 심화로 포퓰리즘 강화와 이 지역에서 反美 성향 가속화 예상됨. 특히 中이 남미에서 영향력 확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美와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으로 부상 가능성
경제적 갈등	7. 반세계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저렴한 노동력이 제공되며, 원가절감 목적으로 세계화가 본격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일정한 성과를 공유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의 수혜에 대한 논쟁 제기. 리쇼어링 등 반발의 장기화될 가능성
	8. 그린 분쟁	미, 유럽의 그린뉴딜 본격화 時 탄소국경세 등의 부과 등이 논쟁의 핵심. 빠른 정책추진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달리 中과 신흥국은 속도 조절을 요구
기타	9. 백신 자국우선주의	선진국은 사회 계층별, 글로벌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백신 배포 과정의 갈등 잠복. 이는 사회적, 국제적 충돌로 발전될 수 있음
	10. (온/오프)테러	군사기술 발전에 따라 전세계에서 치명적인 물리적 테러 우려가 상시화됨.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 역시 빈번하게 발생 중.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테러의 공포가 심각하게 부상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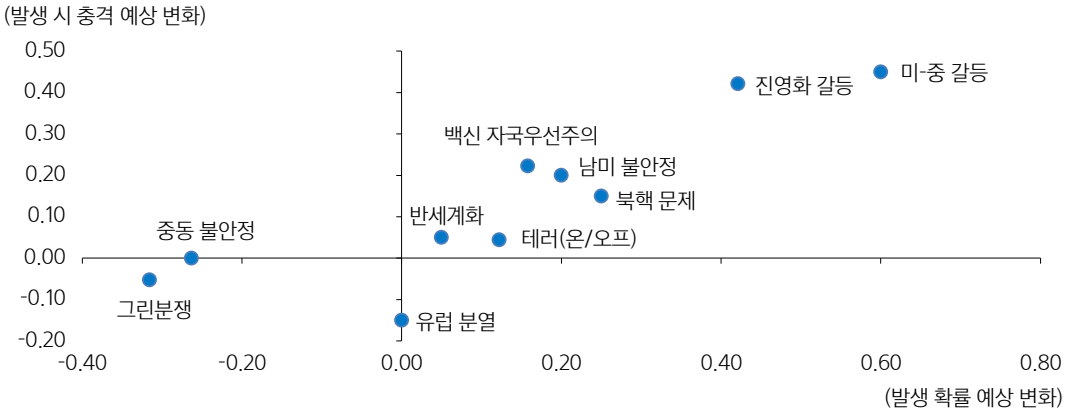
[24] 당사는 리서치센터 內에 지정 학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측 가능한 지정학 변수들을 평가하고 추적. 위원회는 각 위험을 향후 12 개월 이내 「발생가능성」과 위험현실화 시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예상 충격」에 의해 매월 평가하고 추적관리 함. (1~10 척도에 의해 상대 평가)

10대 지정학적 위험의 발생확률과 충격 예상



참고: 당사의 지정학위험 평가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척도 1~10), 상대적 척도
자료: 삼성증권

10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당사 위원회의 평가 변화(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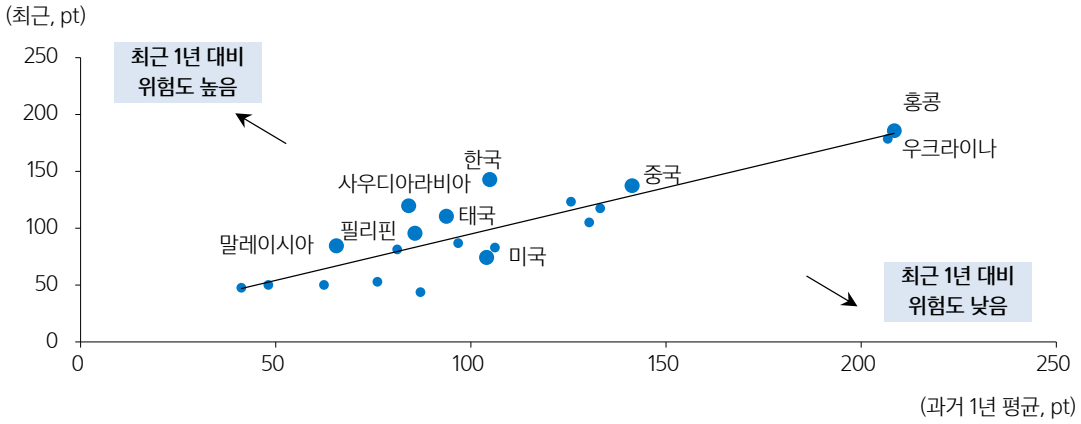


참고: 당사의 지정학위험 평가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척도 1~10), 상대적 척도
자료: 삼성증권

3-2. Geopolitical Risk Index(GPR)로 본 관찰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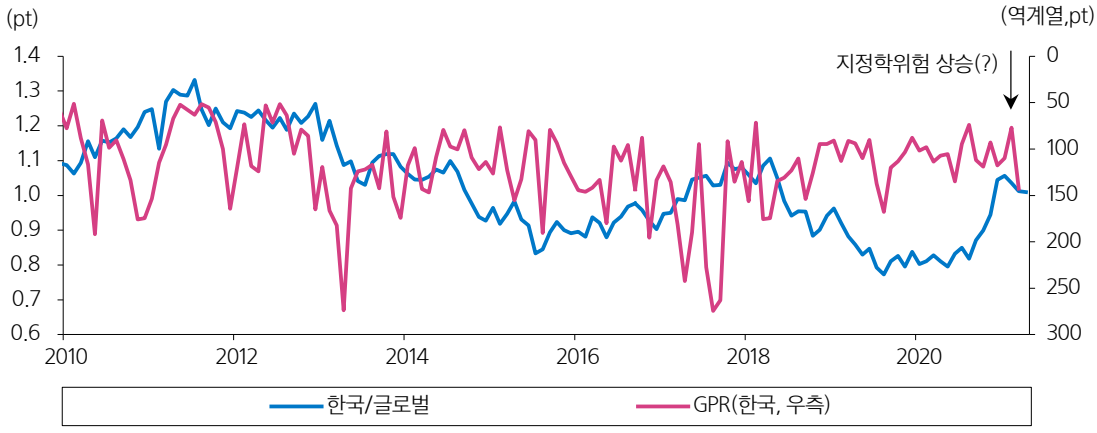
• 3월에는 주요국 중 한국의 GPR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2019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한일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이번 3월에 한국의 GPR이 상승한 것은,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 한국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언론지상에 한국관련 보도량이 늘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GPR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11개 신문에 언급된 지정학관련 텍스트 분석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노이즈를 고려하여 당사는 Misery index 등을 동시에 추적 관리하고 있다(33~35페이지 참고).

주요국 GPR의 직전 1년 평균과 최근치 비교



자료: REFINITIV, 삼성증권

한국의 GPR과 신흥 대비 주식시장 상대성과 추이



참고: 한국 GPR의 과거 추이 및 이벤트는 36페이지 참고
자료: REFINITIV, 삼성증권

4. 참고자료

4-1. 중국의 '국가주권'과 「하나의 중국」

-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하나의 중국(一個中国; One-China policy)」 정책이다. 이 개념은 당초 대만과 양안관계(兩岸關係)[25]로부터 출발했으며, 홍콩과 마카오를 상대로 실행하고 있는 중국식 통일방안인 일국양제(一國兩制)[26]와 연결이 된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원칙과 달리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합(또는 통일)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중 「국가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강압적 통합노력이 초래하고 있는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섹션은 관련한 갈등지역의 이슈를 간략히 소개한다.

신장 위구르(Xinjiang Uyghur) 자치구

-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8세기 투르크계 위구르인들이 처음 정착한 뒤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고유의 민족적 색채와 종교를 유지해온 지역이다. 18세기부터 중국(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이후, 위구르족들은 1933~1944년 '東투르키스탄 제 1, 2 공화국'이라는 자치 국가를 세워 여러 차례 독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1949년 수립된 사회주의 중국에 흡수되었고, 1955년 오늘날의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 위구르족이 독립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민족·언어·문화·종교적 차이 때문이다. 이들의 외모는 동양 보다는 서양에 가깝고, 언어 또한 터키어와 비슷할 정도로 중국의 한족과는 매우 이질적이다. 때문에 과거 중국 정부는 한족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 민족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1949년 약 7%에 불과하던 한족은 2010년 40%를 차지하게 된 반면, 전체의 76%를 차지하던 위구르족의 비중은 46%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 하지만,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면서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자, 누적된 인종갈등이 부상하게 되었다.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두 민족 간 양극화 심화로,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위구르족들의 불만과 박탈감은 커졌고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게 된 것이다.
-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중시하는 이유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함께, 이 지역의 지정학적·정치적·경제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면적은 약 166.5만km^2(중국 국토 전체의 1/6에 해당)로, 티베트와 함께 단일 구역으로서는 어느 행정구역보다도 크다. 또한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권 나라들과 접경하고 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권력의 주도권을 쥐는 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이자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서 중요한 위치인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도 이곳을 향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육상을 연결하여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동쪽으로는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현대판 실크로드 정책이 이 지역을 관통한다.
- 신장위구르에는 120여종의 천연·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자원의 가치 또한 매우 크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경우, 중국 전체 매장량의 각각 30%, 34%, 40%에 달하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최근 신장위구르 지역을 둘러싸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중국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며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행동을 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재무부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가담한 중국 기관 및 관료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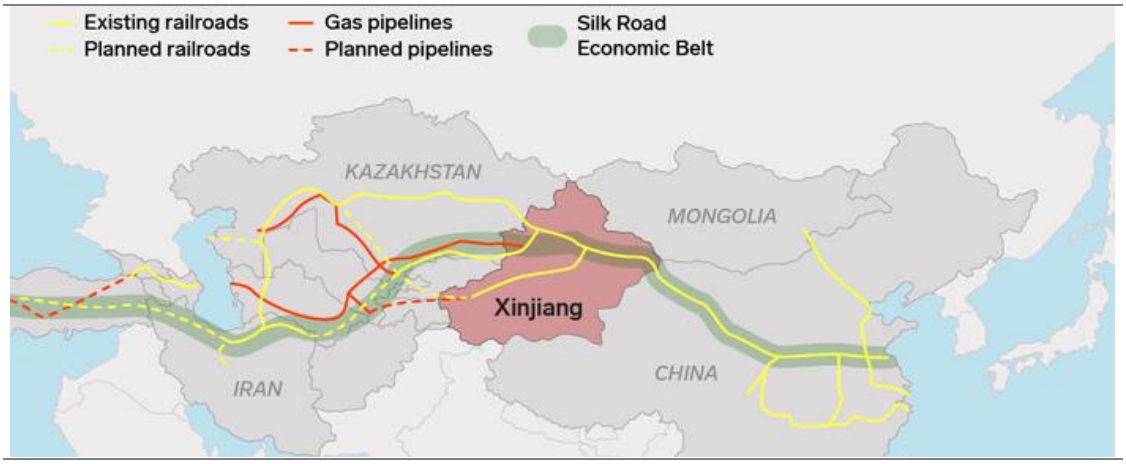
---

[25]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국가와의 외교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본다는 표현이다

[26] 한 국가에 이질적인 두 체제(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는 형태의 통합모델로서 과도기적 단계의 대안적 개념이다. 중국의 일국양제는 현재는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인 동시에, 또한 향후 대만에 대한 통일을 추진하는데 적용하려는 중국식 포용정책이다

-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과 관련한 제재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올해 3월 22일 위구르족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료 2명을 추가 제재한 것에 이어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 지역의 인권문제를 지적하였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개별 기업으로까지 파급되었다. '면화'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 면화의 약 25%를 생산하고, 이 중 84%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의 위구르인들을 향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비판하였고, 올해 1월 신장산 면제품과 토마토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자 스웨덴의 H&M, 독일 아디다스, 미국 나이키 등 국제적인 의류·신발기업들이 인권탄압 의혹을 사고 있는 신장 지역에서 재배한 면화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캘빈 클라인, 타미힐피거 등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기업 PVH 또한 향후 1년 안에 신장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반발하며 신장 면화구매를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도 이런 정서를 반영하여 타오바오, 징동 등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H&M 관련 상품검색을 차단하였고, 화웨이, 샤오미, 비보는 앱스토어에서 H&M 앱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일단 최근에는 중국 내 불매운동 정서가 다소 소강상태로, 관련기업의 매출 타격 또한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이 지역에는 거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욕구와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결합하여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다.

신장위구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매우 중요



자료: Business Insider, REUTERS

티베트(Tibet) 자치구

- 신장 위구르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티베트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문화가 깊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12년부터 1950년까지 독립국가인 '티베트'의 통치 하에 있었다. 그러다 1949년 오늘날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자, 1951년 중국과 티베트 정부는 티베트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십칠조협의; 十七條協議)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티베트는 자치구로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중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었다. 그리고 약속과 달리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자 1959년 3월 대규모 민족 운동이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힘썼다.
- 티베트의 독립 요구가 다른 자치구 및 소수민족의 또 다른 분리운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이를 강경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00년대 갈등의 절정을 지나 티베트 정부는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돌연 노선을 선회하였고,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갈등과 충돌은 없었다.
-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티베트 지역에서 비인도적인 통치와 인권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당국의 허가 없이 티베트 지역에 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지난해 7월 미 국무부는 美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의 티베트 방문을 막는 것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하고, 중국 또한 미국 관리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미·중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홍콩

- 당초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위해 구상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을 홍콩과 마카오에서 테스트해 왔는데, 최근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주지하듯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난징조약을 맺으면서 영국에 할양된 지역이다. 이후 1860년에는 베이징조약으로 주룽반도 남단부가, 1898년에는 신계지구가 추가로 영국에 넘겨져 99년간 지배되었다. 그리고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는데, 이에 중국 정부는 50년간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일국양제를 역사상 처음 시행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가지는 여러 맹점들이다.
- 우선 일국양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전인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적용이 달라진다. 또한 홍콩의 자치범위도 쟁점이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백서를 발간하여 중국의 관할권과 자치권을 중국정부가 그 범위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양제(兩制)'보다는 '일국(一國)'을 강조함으로서 홍콩의 자치 범위를 크게 제한한 것이다.
- 홍콩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반발이 본격 표면화된 것은 2014년 우산운동(雨傘運動)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자를 사전에 심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2~3명으로 제한되고,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인사'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사실상 反中 인사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시민들은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 그러나 2016년 입법회 선거에서 親中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고, 2017년 홍콩 행정장관에 강경 친중파인 캐리 람이 당선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홍콩 시민들간의 갈등 증폭은 다시 예견되었다.
- 2019년 2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일명 '홍콩 범죄인 송환법'으로 알려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지원 개정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홍콩시민들은 저항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 反중파인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주권을 보호하려는 홍콩 시민들의 노력은 빛을 발하는 듯 하였다.
- 그러나 지난해 6월 30일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홍콩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저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홍콩 입법회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범민주파 및 온건파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자격을 모두 박탈시키고, 올해 3월 12일에는 '홍콩선거법'을 개정하였다.
- 총 9개의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①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되 애국자 위주의 홍콩통치를 보장하고, ②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가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③ 매 회기 홍콩입법회 의원수를 기존 7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위원회가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정부가 한차례 추진하려고 하였던 홍콩 행정장관 후보자격을 심사하는 '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대상을 입법회 의원후보로까지 확대하였다.
-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선거법을 개편한 것은 '일국양제'의 제도를 보완하고,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反中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권한과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본질이다. 사실상 홍콩에서는 일국양제가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만

- 중국 정부가 최근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는 지역이 바로 '대만'이다.
- 1949년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는 마오쩌둥(공산당)에 패한 뒤, 타이완섬으로 망명하여 지금의 대만을 수립했다. 이후 약 40년여간 단절해 온 양안[27]의 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과 함께 급속히 해빙된다. 양안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이 원칙 하에 중국과 대만이라는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공식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92 컨센서스').
- 당시 양안관계의 전망은 밝았다.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진일보한 통합의 길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강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후 양안관계는 대만 지도부의 정치적 상황[28]에 따라 발전과 긴장을 반복하여 왔다. 국제정세가 변하고 양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안관계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해 왔고,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정치적 이념적 주장이 전혀 좁히지 못했다.
- 특히 2016년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대만총통이 선출된 이후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차이잉원은 '92컨센서스'를 인정하지 않고,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월,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이후 양안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는 중단된 상태이다. 차이잉원은 구시대적 양안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양안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대 정치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단절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 특히 2019년 '홍콩 송환법' 사태를 지켜본 대만인들의 위기감 또한 거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이잉원은 역대 최대 득표로 재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제 중국과 대만의 시각차는 현격해졌다. 과거 통일을 도모했던 대만이 이제는 '독립'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 미국은 對中 압박정책의 구도에서 의도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대만정부인사들과의 접촉제한을 해지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월에는 미-대만간 해양경찰 MOU를 체결하여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군사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미국은 최근 반도체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향후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간 충돌이 단순히 외교 문제를 넘어 경제, 군사·안보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

[27] 대만 해협을 두고 서안(중국 본토)과 동안(타이완)이 마주보는 관계라고 하여 '양안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음

[28] 대만은 정치적으로 92컨센서스를 지키고 중국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과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으로 나뉘어져 있음

중국의 성(省)들과 '하나의 중국' 관련 현안 지역



자료: Business Insider, REUTERS

4-2.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 (전문번역): 2021년 2월 24일, 대통령령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절 정책 미국은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 사이버 공격, 기후적 충격 및 극심한 기상, 테러 공격, 지정학적 및 경제적 경쟁 그리고 다른 기타 환경들은 중요 생산 능력과 중요 상품, 제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과 무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미국 내 공급망은 국내 생산 능력을 되살리고 재건하고, 미국의 연구 개발 경쟁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기후 변화와의 싸움을 진전시키며 유색인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 성장을 장려할 것입니다.

공급망이 탄력적이고 안전하고 다양할 수록 - 이는 국내 생산 확대, 다양한 공급, 내장된 잉여분, 적절한 비축,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적인 미국 제조업 기반과 노동력을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탄력적인 공급망을 긴밀히 협력하면 집단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 재해 및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제2절 조정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보좌관(APNSA)과 경제 정책 보좌관(APEP)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부의 조치를 2021년 2월 4일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제안서 2호(국가 안전 보장 회의 제도 개편)에서 확인된 기관 간 절차를 통해 조정합니다. 기관의 장들은 행정명령 제 1절에서 언급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히 외부 이해관계자(산업, 학계, 비정부 조직, 지역사회, 노동조합,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등)와 협의해야 합니다.

제3절 100일 공급망 검토

(a) 제 1절에 기술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APNSA와 APEP는 제 6절 (a)에 정의된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본 문서의 날짜로부터 100일 이내에 본 절 (b)에 요약된 공급망 위험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b) 본 문서의 날짜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정된 기관의 장은 APNSA와 APEP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 상무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포장 공급망에서의 위험을 식별하는 보고서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제 4절(c)에 기재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 에너지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의 공급망 위험 확인 보고서 및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제 4절(c)에 기재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i) 국방부 장관(국가 방위 비축 관리관으로서)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희토류(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포함한 중요 광물 및 기타 확인된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위험 확인 보고서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2020년 9월 30일 행정명령 13953에 따라 수행된 작업(외국의 중요 광물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국내 공급망 위협 해소 및 국내 광업 및 가공 산업 지원)을 기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제 4절(c)에 기재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v)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의약품 및 활성 의약 성분 재료에 대한 공급망 위험 확인 보고서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2021년 1월 21일 행정명령 14001(지속 가능한 공중보건 공급망)에 따라 실시된 개인보호장비 등 COVID-19 전염병 퇴치에 필요한 중요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을 보완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제 4절(c)에 기재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APNSA와 APEP는 본 절의 (b)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형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기밀 부록은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d) APNSA와 APEP는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소개 서한(cover memorandum)을 포함해야 하며,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절의 (b)에서 언급된 제품들의 공급망을 포함하여 미국의 공급망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전반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절 부문별 공급망 평가

(a) 본 행정명령의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된 기관의 장은 APNSA와 APEP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 국방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017년 7월 21일 행정명령 13806(미국의 제조업, 방위 산업의 기반,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 및 강화)에 따라 제공되고 미국법 제10조 2504항에 따라 의회가 의무화한 연간 산업 능력 레포트를 토대로 쓰여진 보고서를 최신화하는 방위 기반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방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민간 공급망이 경쟁국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i)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 보건 및 생물학 제제 기반 산업(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에 대한 공급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명령 14001 제4조에 따라 수행한 작업을 보완해야 합니다.

(iii) 상무부 장관 및 국토 안보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기반(상무부 장관 및 국토 안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주요 부문 및 하위 부문에 대한 ICT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산업 기반 내용을 포함하는 공급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v) 에너지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 부문 산업 기반(에너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에 대한 공급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 교통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 산업 기반(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공급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i) 농무부 장관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산물 및 식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APNSA와 APEP는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서비스, 자산 및 데이터("디지털 제품"), 상품, 서비스, 원재료를 포함해 하나 이상의 정의된 산업 기반과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 각 산업 기반 평가의 범위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고 상기 산업 기반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 및 재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적절히 추가해야 합니다.

(c) 본 절의 (a)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본 행정명령 제 6절 (b)에 정의된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핵심 상품과 재료

(ii) 본 행정명령 제 6절 (b)에 정의된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

(iii) 본 절의 (c)(ⅰ)와 (c)(ⅱ)에 해당하는 재료 생산에 필요한 제조와 신설을 포함한 기타 생산능력

(iv) 방산, 정보, 사이버, 국토안보, 보건, 기후, 환경, 자연, 시장, 경제, 지정학적, 인적 자원 또는 강제 노동에 관한 위험, 또는 공급망을 방해, 긴장, 타협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타 우발적 위험 -장애 또는 공격에 취약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공급망의 의존으로 인한 위험, 본 절의 (c)(iii)에서 언급한 생산 능력의 제거 또는 국내 개발 실패로 인한 위험을 포함- 그리고 합리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위험.

(v) 본 절의 (c)(iv)에서 언급한 우발적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비상 대비, 본 행정명령의 제 1절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제조업 공급망, 미국의 산업 및 농업의 기반의 -민간이든 국방이든 관계없이- 탄력성과 역량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포함합니다.

(A)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제조 또는 기타 필요한 생산 능력

(B) 미존재, 단종, 위협 또는 SPoF(단일 장애점)를 등을 포함한 국내 생산 능력의 격차

(C) SPoF(단일 장애점), 독과점, 제한된 탄력성, 하청업체를 위한, 미국 연방 기준집 타이틀 48 섹션 44.101(연방 획득 규정)에 정의된 공급망

(D) 주요 제조 및 생산 자산의 위치, 자산의 물리적 위치에 의한 본 절의 (c)(iv)에서 확인된 중요한 위험

(E)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한 국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통한 본 절의 (c)(ⅰ)와 (c)(ⅱ)에서 언급한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의 배타적 또는 지배적 공급

(F) 본 절의 (c)(ⅰ)와 (c)(ⅱ)에서 언급한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에 대한 대체 가능성 또는 대체 재원의 가용성

(G) 해당 산업에 대한 현재 국내 교육 및 제조인력 기술 그리고 관련 산업의 향후 인력 요구 충족에 있어 확인된 격차, 기회 및 잠재적 모범 사례

(H) 본 절의 (c)(ⅰ)와 (c)(ⅱ)에서 언급한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 개발에 있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 능력의 필요성

(I) 기존 공급망을 지원하는 운송 시스템의 역할 및 해당 운송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 및

(J) 본 절의 (c)(ⅰ)와 (c)(ⅱ)에서 언급한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의 가용성, 생산 또는 운송에 대한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

(i)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가 본 절의 (c)(ⅰ)와 (c)(ⅱ)에서 언급한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정했는지, 국제 참여를 위한 가능한 수단 여부를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의 조치. 이러한 동맹국 및 파트너의 조치를 평가할 때 기관장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ii) 본 절 (c)(ⅴ)에 따라 취약하다고 평가된 관련 산업 기반 및 공급 체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위험의 주원인

(iii) 옵션과 정책 권고안을 위한 목적으로 한 본 절의 (c)(ⅰ)와 (c)(ⅱ) 언급과 디지털 재화를 포함한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의 우선순위 설정. 우선 순위는 법적 또는 규제 요건; 국가 안보에 중요, 비상 대비, 본 행정명령 제1절에 명시된 정책; 본 절 (c)(ⅴ)에 따라 수행된 검토에 기초해야 합니다.

(iv) 산업의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정책 권장 사항. 이러한 권장안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재확보 및 국내 공급망 개발, 대체 공급망 발견을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 협력, 국내 공급망 중복 구축, 비축량 보장 및 확대, 인력 역량 개발, 자금 조달 용이, 연구 확대와 공급망을 넓히기 위한 개발, 공급망이 의존하는 디지털 제품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 해결,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해결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합니다.

(v) 본 절의 (c)(ⅲ)에서 언급된 능력을 강화하고, 본 절의 (c)(ⅳ)에서 언급된 우발 사태를 방지, 회피 또는 대비하기 위한 모든 행정, 입법, 규제 및 정책 변경 및 기타 조치 및;

(vi)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비롯해 본 행정 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조정하는 제안과 본 행정 명령과 동일한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또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행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정부 메커니즘에 대한 조치를 조정하는 제안.

(d) APNSA와 APEP는 본 절의 (a)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형식에 제한은 없지만 기밀 부록은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5절 일반 검토 및 권장 사항 APNSA와 APEP는 본 행정 명령의 제 4절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전년도에 취한 조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하나 이상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한다.

(a) 미국의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b) 법, 규제, 절차, 제도의 설계 변경을 포함하여 공급망 분석과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개혁.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사무실, 인력, 자원, 통계자료 또는 권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공급망 모니터링에 관한 프로세스 및 일정을 포함한 4년마다의 공급망 검토 수립

(d) 동맹국과 파트너를 성공적으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협력 공급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외교, 경제, 안보, 무역 정책, 정보 및 기타 조치.

(e) 이해 상충, 부패 또는 부적절한 모습으로부터 공급망 분석과 조치를 보호하여 공급망 분석의 무결성과 공공의 신뢰를 보장한다.

(f) 공급망의 탄력성, 보안, 다양성 및 견고함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무역 규칙 및 합의의 개혁

(g) 국내 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인력 개혁

(h) 중소기업 지원, 독점 방지, 기후 및 기타 환경 영향 고려, 유색인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 성장을 장려, 미국의 모든 지역에 걸친 경제 활동의 지리적 분산을 정부의 공급망 정책이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과정

(i) 핵심 상품과 재료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모두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해, 제 6절(b)와 (d)에 정의된 바와 같은 핵심 상품과 재료,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연방 인센티브 및 연방 조달 규정의 개정

제6절 정의 본 행정 명령의 목적상

(a) "기관"은 44 U.S.C. 3502(5)에 정의된 독립 규제 기관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아닌 44 U.S.C. 3502(1)에 따른 "기관"인 미국의 모든 권한을 의미합니다. "기관"은 또한 대통령 행정실의 모든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b) “핵심 상품과 재료”은 현재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핵심" 재료, 기술 또는 인프라로 정의되는 재화와 원자재를 의미합니다.

(c) “중요 광물”은 2020년 9월 30일 행정명령 13953호(외국의 중요 광물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국내 공급망 위협 해소 및 국내 광업 및 가공 산업 지원)에서 주어진 용어입니다.

(d) “기타 중요한 상품과 재료”은 국가 • 경제 안보, 비상대비 또는 본 행정명령 제 1절에서 규정한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재화 및 원자재를 말하며, "핵심 상품과 재료"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e) “공급망”은 탐사, 채굴, 농축, 분해, 합금, 재활용 및 재가공을 포함한 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입니다.

제7절 일반 규정

(a) 본 행정명령의 무엇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지도록 해석될 수 없습니다.

(i) 행정 부서 및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로 부여된 권한; 및

(ii) 예산안, 행정안 또는 입법안과 관련 예산부 및 관리부 장의 기능

(b) 본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과 예산금액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c) 본 행정명령은 미국, 미국의 각 부서, 기관 또는 기업,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떠한 개인에 대하여 특정 집단에 의해 실질적, 절차적으로 법과 형평성을 강제하거나 권리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도한 바 없습니다.

JOSEPH R. BIDEN JR. THE WHITE HOUSE, 2021년 2월 24일

4-3. 2021년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일자	지역/국가	이벤트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
1월 21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1월 21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1월 25~29일	Global	세계경제포럼(WEF, digital Davos)
1월 26~27일	미국	연준 FOMC
1월 중	북한	8차 조선노동당 대회
2월 1일	브라질	상/하원 의장 선거
3월 11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3월 14일	프랑스	지방선거
3월 16~17일	미국	연준 FOMC
4월 7일	한국	재보궐 선거(서울, 부산 시장 등)
4월 9~11일	글로벌	IMF 봄 회의
4월 22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4월 22~23일	Global	기후변화회의(화상회의)
4월 27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4월 27~28일	미국	연준 FOMC
5월 18~21일	글로벌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정례회의
6월 10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6월 11~13일	글로벌	D10(G7+한국, 인도, 호주) 정상회담(카비스베이, 영국)
6월 15~16일	미국	연준 FOMC
7월 16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7월 22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7월 23~8월 8일	일본	하계올림픽(도쿄)
7월 27~28일	미국	연준 FOMC
8월 1일	미국	채무한도 조정
9월 9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9월 21~22일	미국	연준 FOMC
미정	역내	APEC 정상회담, ASEAN 정상회담
10월 11~17일	글로벌	IMF 연간 정례회의
10월 22일	일본	총선
10월 24일	독일	총선
10월 28일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
10월 28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11월 1~12일	글로벌	UN기후변화회의(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11월 2~3일	미국	연준 FOMC
12월 14~15일	미국	연준 FO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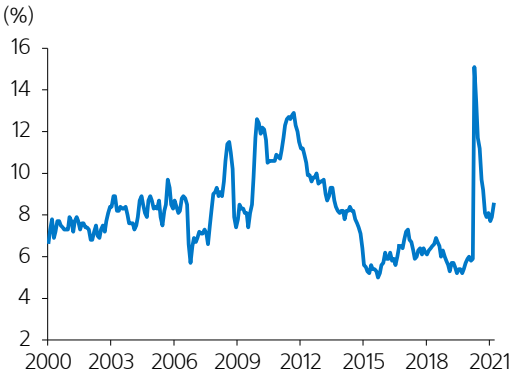
자료: 주요 언론, 삼성증권

4-4. 주요국의 Misery Index 추이

- Misery Index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CPI)를 합한 지표이다. 각국 경제의 핵심적인 고용과 인플레 상황을 추적하는 이유는 언론의 텍스트 분석에 의존하는 GPR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에서 Misery Index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월에 지적한 바와 같이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이들 국가에서는 통화약세와 인플레 우려로 일제히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주요국 Miser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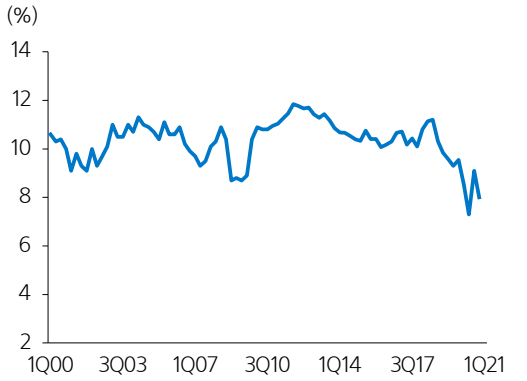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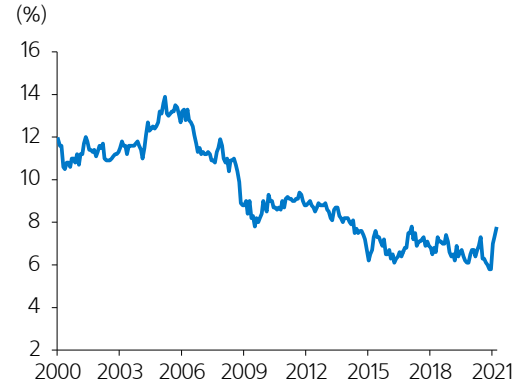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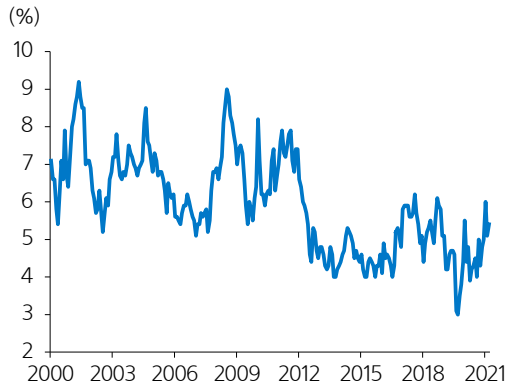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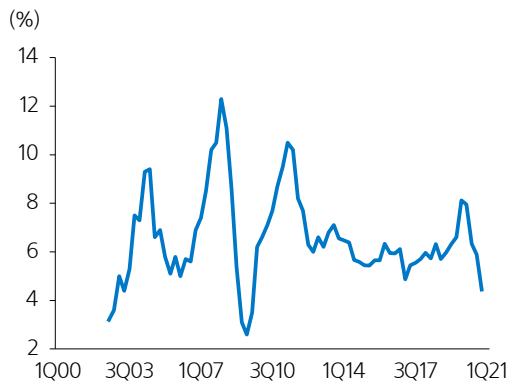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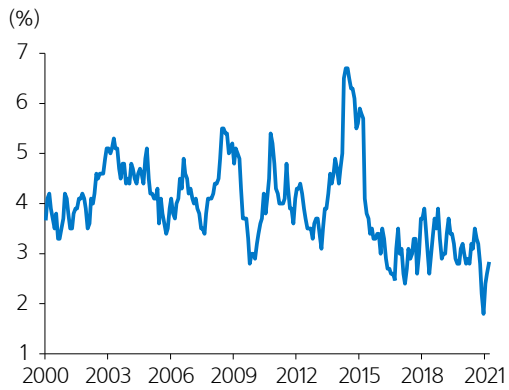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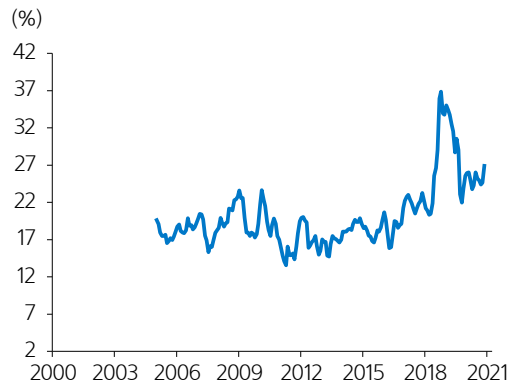
중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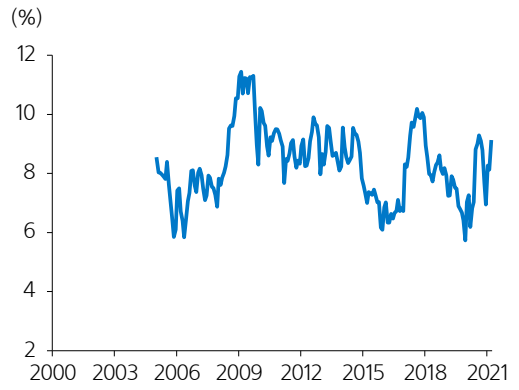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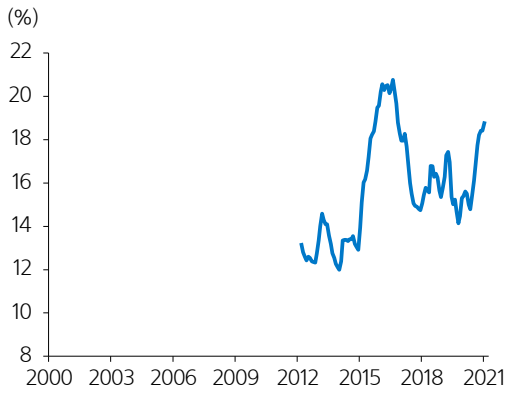
남아공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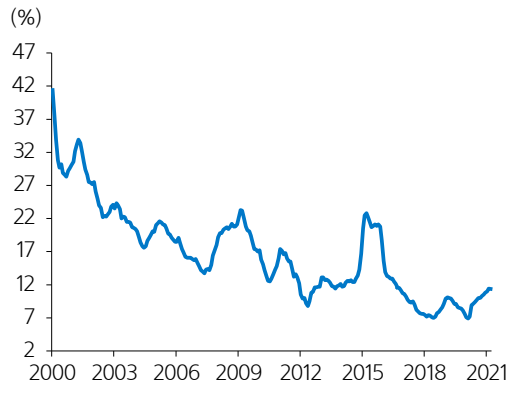


브라질



참고: 터키('20.11월), 브라질('21.1월), 영국(2월) 제외, 3월 전망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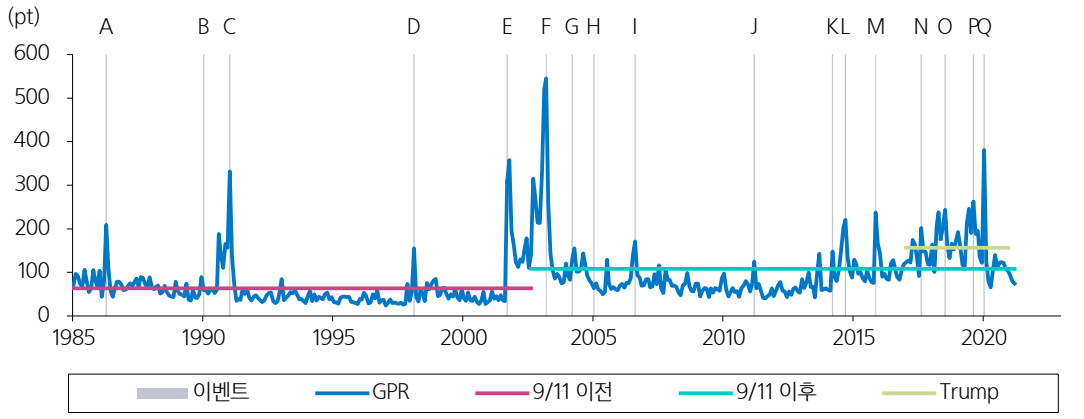
러시아



참고: 프랑스, 중국, 남아공은 2020년 4분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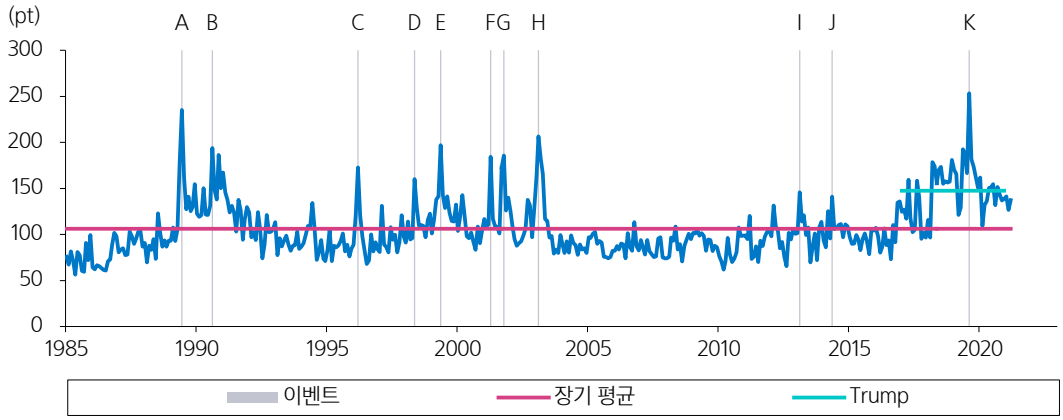
4-5. 주요국의 GPR 추이

미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 주요 이벤트



참고: A 美 시리아 폭격 (1986.4), B 쿠웨이트의 사우디 침공 (1), C 걸프전 (1991.1), D 빈라덴 위협 (1998.2), E 9/11 테러 (2001.9), F 美 이라크 침공 (2003.3), G 마드리드 폭탄테러 (2004.3), H 폭탄테러 (2005.1), I 대서양횡단항공기 테러미수 (2006.8), J 아랍의 봄 (2011.3), K 러 크림침략 (2014.3), L ISIS 위기 (2014.9), M 파리테러 (2015.11), N 북핵 위협 (2017.8) O 美 이란 긴장 (2018.7), P 美 중 갈등 (2019.8), Q 中 코로나 확산 (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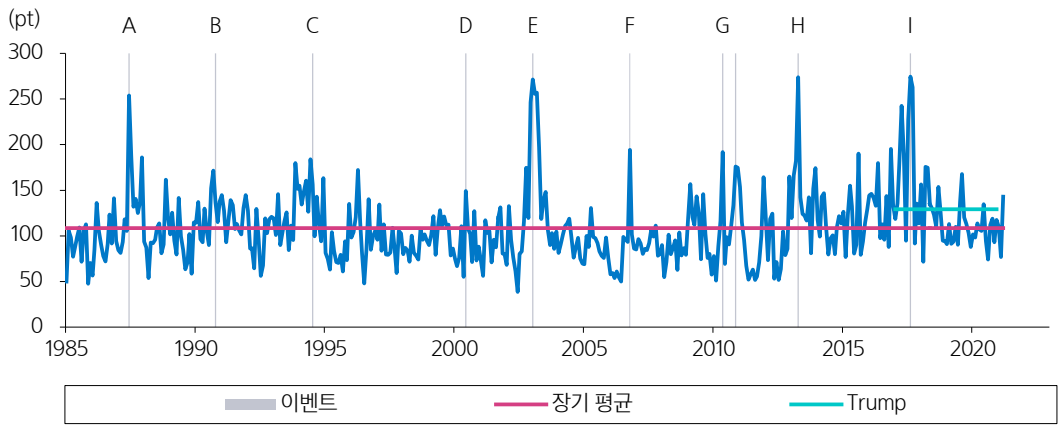
중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천안문사태(1989.6), B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8), C 3차 대만해협위기(1996.3), D 인도네시아 인종폭동(1998.5), E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피폭(1999.5), F 하이난섬사건(2001.4), G 미국 아프카니스탄침공(2001.10), H 미국 이라크침공(2003.2), I 북한3차핵실험(2013.2), J 우루무치역 테러(2014.5), K 미중 무역갈등(2019.8)

자료: 삼성증권,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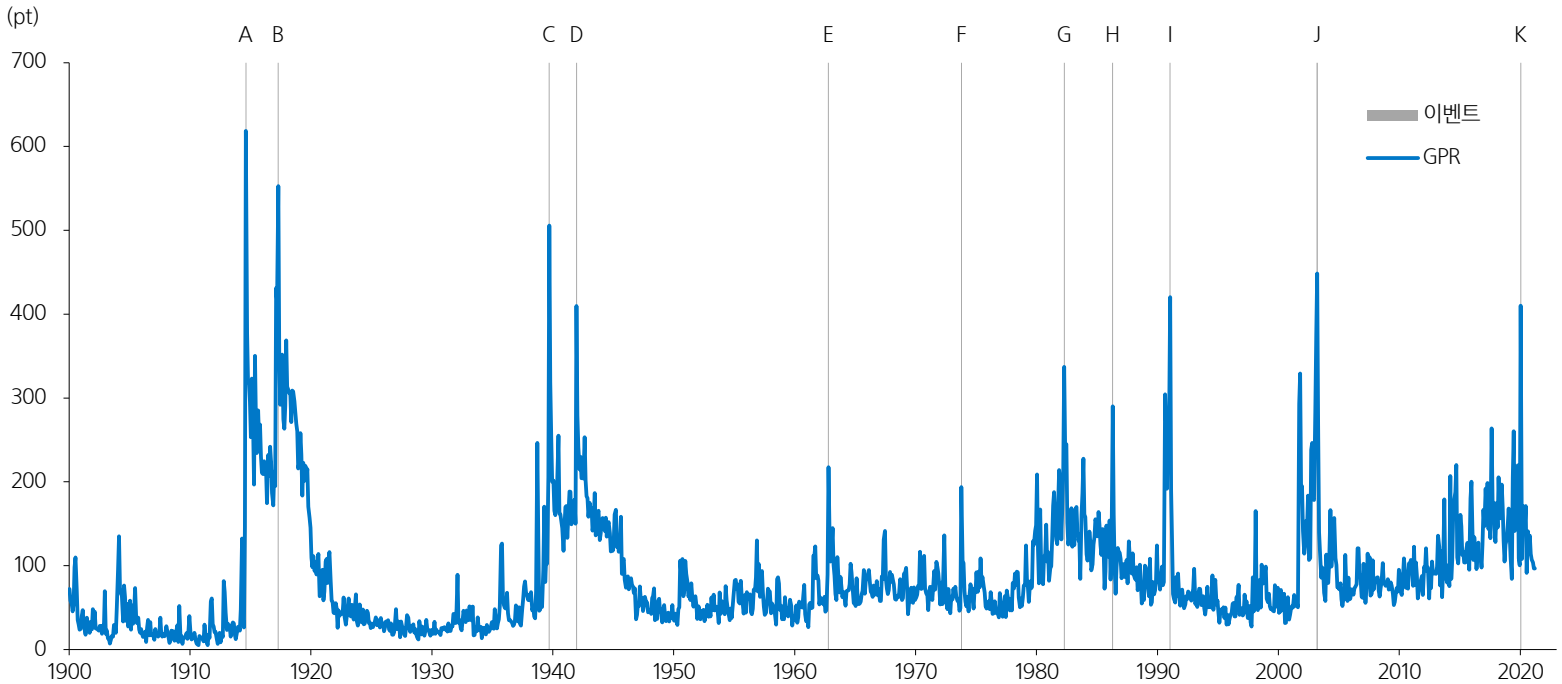
한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6월 민주항쟁, B 한-소련 수교, C 김일성 사망, D 1차 남북정상회담, E 노무현 대통령 당선, F 북한 2차 핵실험, G 유럽재정위기, H 개성공단 중단, I 북-미 긴장

자료: 삼성증권, REFINITIV

전세계 장기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1차 세계대전 발발(1914.8), B 미국 참전(1917.4), C 2차 세계대전(1939.9), D 일본의 진주만 공격(1941.12), E 소련 핵실험 재개(1962.10), F 1차 오일쇼크(1973.10), G 포클랜드 전쟁(1982.4), H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4), I 걸프전(1991.1), J 美 이라크침공(2003.3), K 中 코로나 확산(2020.1)

자료: 삼성증권, matteoiacoviello.com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분석 2021년 1월

이슈 1. 북한 8차 당대회 결과와 시사점
이슈 2. 글로벌 10대 지정학위험
이슈 3. GPR로 본 관찰국가



지정학분석 2021년 2월

이슈 1. 美 NSC 핵심들의 對중국 시각
이슈 2. 바이든 인선의 포석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3월

이슈 1. 미국의 對중국「기술유출 통제 기구와 법안」
이슈 2.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금융시장 법안」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SAMSUNG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Interbrand Best Korea Brands 2019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